

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등록일자	2015. 7. .
결재일자	2015. 7. .
공개구분	공개

담당자	입법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당관	사무처장	의 장
치태영	박병영	불경주	가시영	강기영
협 조				

-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충남교육 발전방안 -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2015. 7.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평·행사개요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	2
② 지정토론(4인)	2
③ 청중토론(4건)	4
III. 향 후 계 획	5
[별 첨]	
□ 현 장 사 진	6
□ 언론보도 현황	7

-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충남교육 발전방안 -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 총 평 》

- ❖ 금회 토론회는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하여 학부모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으며,
- ❖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청의 방과 후 학습 및 자율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I 행사 개요

- 일 시 : 2015. 7. 22.(수) 15:00~17:0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신청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
- 참 석 : 200여명(학부모, 국공사립학교 교원, 관계공무원, 주민 등)
- 토 론 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주제)
진 행	백동기	前 대전시교육위원	
발 제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
토 론 (4)	백동기	前 대전시교육위원	특가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윤성훈	EDC컨설팅 대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문제점 및 방안
	문정실	신계초등학교 운영위원	효율적인 방과 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이상길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	대학입시의 변화에 따른 방과 후 교육 방안

Ⅱ 주요 토론내용

① 주제발표

① 홍성현 위원장(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방과 후 학교이며 전국 99.9%인 11,686개 학교에서 446만 9천명이 방과 후 학교 참여
- 초, 중, 고에서 이미 대다수 강제 혹은 반 강제적으로 시행중인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을 지키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야 함
- 교사는 학생중심의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찾아 개발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고, 학부모는 소통과 자녀 양육에 전념해야 할 것임
-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습 선택권 보장에 따른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야 함

② 지정토론 (4인)

① 백동기 (前 대전시교육위원)

- 학생들의 특기적성 맞춤 교육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맞춤식 수업을 한다고 하나, 음악과 체육 등 일부 예체능 과목만으로 특기적성 맞춤교육이 맞춰져 있어 예체능

이외의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계발해주는 프로그램은 전무하기에 보완이 조속히 필요함

- 효과적인 적성계발을 위하여 학교별 특기 진로 선생님을 배치하여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가 진행되거나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

② 윤성훈 대표(EDC컨설팅)

-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교,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사교육비 경감효과 미흡 등을 개선해야 함
-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이라는 방과 후 학교의 중요한 운영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실정
-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다른 역할 수행으로 교육의 조화를 이룸
- 즉,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함

③ 문정실 운영위원(신계초등학교)

- 효율적인 교육 본연의 방과 후 특가적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내용, 지도방법을 개선해야 함
- 방과 후 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과 질 높은 선생님과 실력이 확인된 인재를 발굴하여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야간자율학습을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의 출발점으로 야간자율학습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질려면 학생들의 학습 자료의 제공,

지적 수준이 높고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강 환경 조성과 더불어 독서 교육도 병행

④ 이상길 교사(천안월봉고등학교)

-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바뀜
- 방과 후 교육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중심의 교육학습방법의 실천,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용적인교육,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 독서활동의 강화 등을 통하여
-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의 교육역량 집중

③ 청 중 토 론

- 방과후 수업이 공교육에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때 방과 후 수업한 내용을 출제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적이지 않는가?
-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습부진자들은 혼자서 자습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학습 선택권을 주어서 인강, 과외 그리고 학원 등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 예체능의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 학습 시간이 무의미하고 아까운 시간이니 야간자율학습 대신 실기 위주의 특기적성 공부를 하게 해 달라...
- 본래 방과 후 수업의 목적이 교과목이 아닌 예체능 위주 수업이었는데 요즈음 방과 후 수업은 교과목 위주의 방과후 수업이 된 것 같으니 본래의 취지에 맞는 예체능 위주의 방과 후 수업이 되게 해 달라?

Ⅲ 향 후 계 획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교육청·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위원회)

참 고 : 1. 행사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

참 고 1

현 장 사 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22건)	비고
신문 보도		9건	
1	충청투데이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논의	
2	중도일보	도의회,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팔건어	
3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온힘	
4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학습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5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이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6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방과 후 학습 자율성 보장 돼야	
7	중앙매일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8	신아일보	정규수업 외 학습선택권 보장 방안 모색	
9	충남일보	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구슬땀'	
인터넷 뉴스		13건	
뉴시스, MBS, 충남도민일보, 충남투데이, 특급뉴스, 뉴스충청인, 타임뉴스, 국제뉴스, 충남신문, 뉴스파고, 굿뉴스365, C뉴스041, 천지일보			

※ 보도내역 별첨



충남도의회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충남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논의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반강제적 방과후 학교 만족도 낮아
관련 조례 제정 운영 등 의견 교환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고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 1686개 학교에서 446만 9000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 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자율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위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octoday.co.kr

113 X 237 mm

도의회,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팔건어

천안교육청서 의정토론회
방과후 학습 등 문제 논의
수업 외 자율성 보장 모색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성현 도의회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1686개 학교에서 446만9000여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

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임의적으로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길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내포=유희성·천안=김경동 기자

168 X 119 mm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온힘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위한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 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후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 1686개 학교에서 446만 9000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후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후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의 경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포=김현호 기자

141 X 85 mm

충남도의회,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수요자(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 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1686개 학교에서 446만9000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자율 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위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형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엽 기자 lee.y8904@daeilhy.com

111 X 151 mm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이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천안시 의정토론회...타 지역 조례 제정 운영으로 학습권 보장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수요자(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고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9%인 1만1천686개 학교에서 446만19천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며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

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의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형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차순우기자

140 X 128 mm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방과 후 학습 자율성 보장 해야

수요자 중심 아닌 반강제적 참여...능률저하로 이어져

타시·도 관련 조례 제정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장



도내 초·중 학교 방과 후 학습이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천안교육청 의정토론회에서 도내 방과후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99.9%인 1만1천686개 학교에서 446만9천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후 학교”다.

그러면서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지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치 임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동기 전 대전 시교육위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형 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

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교사와 학생 부담 기증, 사교육비 경감효과 미흡 등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 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천안월봉고 교사 지정토론회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포=이성우기자

155 X 151 mm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수요자 중심 아닌 반강제적 참여 능력 저하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수요자(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

만 1686개 학교에서 446만 9000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자율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의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형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교사와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비 경감효과 미흡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 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오현수 기자

241 X 124

정규수업 외 학습선택권 보장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천안교육지원청서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규교과

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 1686개 학교서 446만9000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라며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자율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

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의원은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윤 대표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 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교사는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b.co.kr

239 X 102

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구슬땀’

수요자 중심 아닌 반강제적 참여 능력 저하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수요자(학생)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원안 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건설링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고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1686개 학교에서 446만 9000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

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임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의원은 “학생의 복기적성 맞춤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 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태국 기자 hnk777@naver.com

142 X 169 mm

□ 인터넷 뉴스(13전)

【뉴시스】

[충남도의회,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한 의정토론회](#)

유효상 기자

【MBS】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이준희 기자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수요자 중심 아닌 반강제...](#)

정연호 기자

【충남투데이】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방과 후 학습 자율성 보장 돼야](#)

충남인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22일 의정토론회 개최](#)

김광섭 기자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발전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인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홍대인 기자

【국제뉴스】

충남도의회, 학습 선택권 보장 앞장

박창규 기자

【충남신문】

충남도의회, 학습 선택권 학생에게 돌려줘야!

정경숙 기자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선택권 보장 위해 노력

한광수 기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C뉴스041】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하라!”

김지현 기자